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질의

“도 수출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장학수 ‘육정호 수상레프토단지 조성은 꿈수행정 아니냐’

정호윤 ‘대기오염측정 확대를’

최진호 ‘수출정책 개선방안은’

조병서 ‘축소 어업가구 대책은’

송성환 ‘면세점 유치 문제점은’

간역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수상레프토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선언서 협약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앞으로는 양 시·군에서 상생협력 선언서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해 나가겠으며, 선언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업도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정호윤 의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개선 ▲장애인 인권 침해 ▲미세먼지 대책 ▲전북 지속 가능 협의회 발전 방향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된 영동도 있는 곳은 전주, 군산, 익산 등 8개 시군에 불과하다. 대기 오염측정망 확대 설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은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돼 있지 않다. 현재 2차 국가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반영했고 우선, 2017년 2개소(완주, 진안)를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설치 시·군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진호 의원

▲전북경제위기론 ▲세계잼페리대회 유치점점 ▲자립학교 대책 등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도내 기업의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다. 수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송 지사는 “수출경기가 나쁜 상황이다. 전북 수출 중소기업 수는 1,002개(전국의 1.2%)로 내수 중심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발굴, 육성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와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병서 의원

▲어업인구감소 대책 ▲어항개발 편중 해소 방안 ▲갯길 가공업 활성화 방안 ▲새만금지구 수산자원시설 활용 방안 ▲갯벌 생태지구 효과 의문 ▲완주 게임과학교 개선 대책 등 이날 가장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전북어업가구는 1991년 5,600



최진호 의원



조병서 의원

여가구로 점점을 찍고 대폭 줄어들고 있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10여년간 제대로 된 발전계획이 없었다. 올해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확보,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어업생산량 증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송성환 의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교통약자 이용편의 위한 정책개선 등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면세점,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의 현 주소는 어디이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12년 관세청에 면세점 신청을 했지만 수익성 부족으로 자진 철회한바 있다. 지속적으로 관세청과 접촉해 면세점 유치에 노력 중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 30만 이상 증가해야 하는 대기업 참여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내면세점 대안으로 대형 쇼핑점과 화장품, 토산품, 지역홍산업체 등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송성환 의원

김영배, 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 충돌 유감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청사 내에서 도 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그동안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었다”며 “지난 9일 민의의 전당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어린이집 회원간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회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정세균 ‘상시청문회법, 법리 검토 먼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 여부에 대해, “먼저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도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임 의장으로 상시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의장으로서의 첫 출근 소감에 대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해서 정말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밝혔던 강한 국회 운영에 대한 의지와 관련,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를 일은 아주 유연하게 잘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든지,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잘 따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김수민·박선숙 의원 수사

안철수 ‘사과’, 박지원은 ‘반발’

검찰이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10일 국민의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대응을 둘러싸고 엇박자가 나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저자세를 취한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수사에 반발하는 등 뒤숭숭한 모습이다. 중요한 사안을 두고 당 지도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께 격정까지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당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민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으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법을 주시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검찰의 흥민포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 감싸기엔 철저하지만 야당엔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주선 국회의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정치적 방향으로 하거나 편파적·불법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면, 두 의원을 비롯한 관계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은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품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라는 게 변 의장 측 설명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도 군용품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숨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났다.

이밖에도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5년으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2~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영구 퇴출시킬 수도 있도록 개설했다. 현행법은 2년의 범위 (1월이상 2년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다소 징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의원은 “군용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품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방위산업 비리를 엄단하고 비리 범죄자가 대표 등으로 있는 업체의 영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위산업비리법 제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주 기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인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청년허브를 찾아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더민주 국회의장 낙선자들 향후 행보는?

문희상 ‘정권교체에 역할’ · 이석현 ‘평의원 활동’ · 박병석 ‘더 큰 꿈’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부 수장직 경선에서 탈락한 문희상(6선)·이석현(6선)·박병석(5선) 의원에 대해 당권 도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추미애, 송영길, 김진표 의원 등 당내 또다른 중진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5~6선인 이들의 출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문희상 의원의 경우 온건한 성향을 바탕으로 친노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비대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해 당 내부시정을 잘 안다는 이유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일단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1목표인 정권교체에 대해 마지막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뒤편이라고 나서지는 것보다는 대신 국민에서 선대위원장 등 요청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권에는 생각이 없다’며 ‘비대위원장은 아무도 안하려 하기 때문에 한 거지, 지금 당대표 후보군은 많지 않느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당간부는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일단 상임위 배분을 보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며 “평의원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에서 떨어지면 당대표 도전하지 않겠다”며 “당대표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박병석 의원은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나 한 측근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관리형 당대표’를 맡기 보다는, 더 큰 역할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당대표나 후반기 의장 등의 선거 출마 가능성은 남겨 둔 것 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지난해 자신이 발족한

‘중남미포럼’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일부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위 활동을 통해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살피고 당 기계부채 TF에서 기계부채 대책미련에 힘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낙선한 중진 다선의원들이 당대표 선거에는 한결같이 나서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내 대주주인 친노·친문이 움직이거나, 문재인 전 대표의 강력한 후원 및 권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 차기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본선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책임자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가 당 대표에 오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인사들보다는 의장 낙선자 중에 더 가까운 인사들이 많다. 때문에 문 전 대표와 주류 측에서 이들 의장 낙선자들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성주 기자